

존경하는 의원님 귀하

이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유전자변형(GM)식품 표시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글을 보냅니다. 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온 GM작물은 그 안전성이 이미 확인된 것들이며 미국에서는 아무런 표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외래 유전자(DNA)나 그로부터 유래한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표시제도를 확대하여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예, 식용유, 간장 등)에 모두 표시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1) 관리당국이 이들 식품의 사용 여부를 분석하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여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 (2) 만약 원료 구입면장 등에 의한 추적조사를 하면 국산 식품은 규제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규제할 수 없어 국내 식품기업이 크게 타격받게 됩니다.
- (3) 현재 식용유와 간장 등의 식품은 대부분 GMO원료를 사용하며 이들이 들어가지 않는 식품이 별로 없으므로 표시제를 확대하면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가 붙게 됩니다.
- (4) 그동안 일부 GMO반대 단체들의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활동에 의해 GMO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가 붙으면 '먹을게 없다'고 아우성치는 국민으로 광우병대란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동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GM식품 표시확대는 국민이 GMO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GM식품 표시제도는 각나라마다 형편에 따라 국익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GM식품 표시확대는 소비자의 알권리 수준에서 가볍게 다룰 사항이 아니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발표한 '생명공학 수용을 통한 한국 농업 혁신 정책방안' 과 본 재단이 출판한 'GMO 바로알기' 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7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